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노동탄압

문재인 정부에 맞서 연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 12면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3면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4면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8면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9면

서평 《죽은 역학자들》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10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학생 고통 이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11면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6~7면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김영익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F-35 도입 반대 운동 등의 평화적 활동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로 매도했다.

검찰은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북한 인사와의 접촉 등 핵심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압수수색 중에 암호로 된 지령문과 대북 보고 문서가 담긴 "4겹으로 밀봉된 USB"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종표 씨는 자신들은 그런 USB를 소유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전부 내지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안 당국이 그런 일을 벌인 전력은 정말 많다.

당장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던 내란 음모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만든 토론



F-35 전투기 반대한 평화 활동은 정당하다

녹취록에서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왜곡됐음이 밝혀진 바 있다.

설사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정부 인사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토론·논쟁할 일이지 처벌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 당국자를 접촉해 정상회담 성사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주려고 했음이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관계자 어느 누구도 처벌은커녕 수사도 받

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내부의 적'을 겨냥한 사상통제법이다. 모호한 규정으로 정부와 사법 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든 사상통제법의 핵심 특징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계급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처럼 지배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좌파 활동가가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무겁게 처벌받기 일쑤다.

국가 기밀?

문재인 정부의 공안 당국은 이 사건이 국가 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넘기고 북한 '지령'으로 국내 정치권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속된 3인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그 '국가 기밀'이라는 것의 핵심 내용에는 민중당(현 진보당) 내 본인들의 징계 문제와 충북 지역 민중당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후자의 내용은 그 활동가들의 이력과 개인적 평가 위주다. 이런 게 '국가 기밀'이라고?

설령 공안 당국의 주장대로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해도 이들이 북한에 국가 기밀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신상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불패할 수 있지만, 이런 '보고'로 이들을 간첩으로 몰고 구속 기소하는 것은 부당한 마녀사냥일 뿐이다.

2006년 '일심회'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공안 당국은 일심회 관련자들이 민주노동당 간부 300여 명의 성향 등을 북한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관련자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커다란 압박 속에서 2008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가 일심회 사건 구속 당원들의 제명을 추진했다.

당시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당시 단체명) 등은 일심회 관련자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제명에 반대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들을 쫓아내면, 진보정당이 마녀사냥을 방어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용인하는 꼴로 운동의 정치적 후퇴를 낳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호소가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징계 시도가 좌절됐다.

이번에도 청주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을 규탄하고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강동훈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놔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미리 내고 10년간 월세로 거주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실행된 바 있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이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집값의 10퍼센트 보증금'을 부각해서, "집값의 10퍼센트만 내고 10년 거주"하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도 누구나집의 월세를 주변 시세의 85~95퍼센트로 책정하기로 했으며, 저렴한 주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값의 10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집값은 월세로 내야



소형 주택 월세 98만 원(보증금 7000만 원), 소득이 충분해야 '누구나집'

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지 않다.

예컨대, 누구나집과 비슷한 사업인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26~38제곱미터의 소형 주택도 월세가 98만 원(보증금 7000만 원)이나 돼, 제때 입주자를 찾지 못하기도 했다. 즉, 누구나집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려면 월세로만 최소 1억 원 넘게 써야 한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낮출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누구나집의 분양가 상한을 공모 시점의 시세에 매년 가격 상승률 1.5퍼센트를 적용해 결정하기로 한 것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즉, 10년 후에도 현재 시세의 20퍼센트 정도 상승(복리 1.5퍼센트)한 가격으로만 팔 테니 그 이상 집값이 오르면 주택 구입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셈이다. 이미 집값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도 매년 1.5퍼센트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누구나집을 구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파 언론들은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져 거주자가 분양을 포기하면 그 피해가 고

스란히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뉴스테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건설업계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린 바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 민간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7.67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은 공공 택지를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져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도 민간 사업자가 5퍼센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누구나집 사업을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누구나집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자 90여 업체가 참여 의향을 냈다고 한다.

결국 누구나집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줘 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일 뿐,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오마이뉴스>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LH와 인천도시공사도 공공 택지를 민간에 판매해 약 3000억 원가량의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애써 조성한 공공 택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건설하기

는 커녕 민간 사업자들을 배 불리는 대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내맡기면서 거둬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문제를 발생시켰다.

누구나집 같은 민간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니라 저렴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종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 드라마평 <오징어 게임>

★ 독자편지에 답함
'점거하라' 운동은 어떻게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건설
운동으로 이어졌는가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김문성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의혹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도 당시 검찰 내부 동향에 대해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박근혜 정부 때) 분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터져나와 이번에는 이재명이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의혹을 따라가 보니,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우파 측 인사들, 재벌까지 등장했다. 추가로 여당 인사가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상호 고소·고발도 늘었다. 의혹 제기 측도 고소·고발을 하지만, 해명해야 하는 쪽에서도 일단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하고 보기 때문이다.

대장동 건에서 뒤늦게 이름이 등장한 SK 회장 최태원도 자신의 연루설을 제기한 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오래된 부패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개혁가를 자처한 사람들의 부패와 위선도 확연히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은 웬만한 해명은 믿지 않는다. 게다가 인터넷 매체 발달로 루머 유포도 순식간이다.

매체들도 갈려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파편적 폭로 보도를 이어간다. 몰타기에 술 타기, 약 타기가 반복되는 꼴이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사 둘(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모두 반대자들을 고발한 당사자이자,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수사 대상이 돼 있다.

게다가 둘 다 자신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것(이재명의 억강부약, 윤석열의 공정정대한 공권력 행사)에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이런 초유의 난맥상이 보여 주는 건 뭘까?

첫째, 공식 정치 내부가 혼란스럽고, 불안증이 커 매우 신경질적이다. 그래서 현 위기의 깊이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제 침체가 결합된 복합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세계 무역 축소나 커져 가는 부채 문제가 큰 난

관인대도 말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가 빚어내는 국제질서 불안정으로 안보·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그 안전판으로 군비 확대에 필사적이지만, 주변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사면하는 등 지배계급 달래기 시도를 하지만, 이들은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부패는 여전히 한국 정치의 아킬레스건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 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등장한다. 과거 악명 높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의 후신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기구들이 대장동 의혹 파위를 쥐고 있다가 정치·경제 권력과의 거래에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 건은 공유지와 서민 주택 지구를 잘 팔릴 고급 아파트·빌라 부지로 개발하면서 권력자들과의 내밀한 네트워크를 만든 투기 세력들이 떼돈을 번 사건이다. 정치권·법조계 고위 권력자들, 재벌(SK), 지방 정부·공기업 등 나올 만한 직업군들이 거의 다 나온다.

서울 위례 신도시 개발 등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됐거나, 화천대유 핵심 인사들이 다른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건에 연루된 것인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

한편, 문재인이 윤석열과 대립하며 만든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하고 있으니, 이재명과 대장동 건도 수사해 형평을 맞추라는 압력도 크다.

그렇다고 막상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 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불만을 살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이 매우 중요한 대선 쟁점의 하나인 상황에서 대장동 건에서 드러난 부동산 투기 세력 특혜와 돈잔치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면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키울 것이다.

셋째, 이런 배경 때문에 차기 대선의 결과는 매우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훨씬 높지만, 우파 야당은 대선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은 우파적 본질을 드러내 거품이 많이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지만, 이어 윤석열에게 실망한 중도층이 보기에 홍준표 등은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 국민의힘 후보 간 토론을 보면 ‘봉숭아학당’이 절로 떠오른다. 우파 자체도 당선 가능성 때문에 윤석열과 홍준표로 갈려 있는 듯하다.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우파 인사들이 특혜를 받은 게 들쭉났다. 깨끗한



은근간경남부산청년기자

천문학적 수익 대장동 개발 건은 이 체제의 수혜자들이 왜 그토록 부동산 개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해왔는지 새삼 보여 준다

중도로의 이미지 변신(위장)이 쉽지 않은 것이다.

당 후보 경선 중인 민주당은 집권당이면서도 경선 기간 내내 상호 비난만 난무했다. 특히 이재명에게는 우파나 할 법한 비난도 많았다. 이재명은 천문에게서 공격받으면서도 그동안 실용적 개혁가 이미지를 쌓아왔기에, 여당 후보임에도 당내 1위와 전체 1·2위를 용케 지켜 왔다.

그러나 대장동 건은 그의 부패는 아닐지라도 정치의 약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노동운동에 기반을 갖고 있고 친서민 개혁으로 점수를 쌓아왔지만, 또한 이를 기업과도 연결시키려 해 왔다.

성남시도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수천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민간 투기 세력이 손쉽게 더 큰 이익을 챙겨간 사실은 이재명의 모순을 보여 준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 전임 성남시장의 예산 탕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의 공영 개발 반대 속에서도 개발이익을 돌려받았으며 대장동 사례를 자화자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 유세에서 말을 조금 바꿨다.

“나를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개발이익을 환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이재명에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불가피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또한 독자성을 전제한다. 독자성의 핵심은 정치적 비판과 조직의 별개성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을 이루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층층은 조합원들의 계급의식 발전에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허구가 또 드러나다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은 이재명을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빌런 안남시장(황정민 분)처럼 이미지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수라’는 이미 상영 시점에 이재명 비방용 영화로 알려졌다.)

그런데 막상 까 보니 문제가 된 화천대유에는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스타 특별검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원유철 등이 하는 일 없이 돈만 타 가는 고문으로 등록돼 있었다.

게다가 하나은행을 거쳐 들어간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수백억 원의 출처가 SK 일가(최태원의 동생 최기원)인 것이 드러났다(하나은행은 SK 주거래 은행).

부패 사슬

연루된 법조계 인사들은 정치 성향도 다양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대리’ 수령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는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 출신이다. 이경재는 최순실(최서원)의 변호사였다. 그런데 본인이 고문이었고 그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는 김대중계로 분류되며 박근혜·최순실을 구속시킨 특별검사였다. 특검으로 박영수를 추천한 자는 현 국정원장 박지원이었다.

우파는 권순일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록 한 인물이라며 ‘사후뇌물’ 사

건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이재명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로 수혜자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른다. 일부는 최태원 사면을 박근혜에게 로비하는 창구였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런 부패의 양상은 검찰을 개혁하거나(개혁의 고전적 의미에서는 이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공수처(검찰2) 설립으로 부패를 척결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본지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검찰의 기원과 인적 배경, 조직 구조 자체가 한국 자본주의 부패 사슬의 일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기업 소유자 등 체제의 최대 수혜자들까지 이런 돈잔치에 연루되는 마당에 체제 수호 기관인 검찰·경찰이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수사·처벌을 넘는 항구적·발본적인 부패 척결을 해 낼 수 없다.

게다가 대장동 의혹이 실제 법으로 속속들이 밝혀져 처벌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법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 문제인 부패에 허술하기 때문이다. 그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부패 사슬의 일부다. (대법관까지 연루되지 않았다.) 이미 관련자들은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뽐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더는 개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부패는 자본주의 하에서 사라질 수 없고, 검찰·경찰은 자본주의 국가가 분쇄되기 전에 (착취와 억압이 완화된다는 의미에서) 개혁될 수 없다.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이정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회사로 성장했다. 헝다그룹은 전기차, 놀이동산 같은 레저, 식음료, 보험사 등으로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다.

시장 개방, 기업 규제 완화, 지방정부의 후원과 유착, 국유은행들의 대출 등 덕분에 헝다그룹은 급성장할 수 있었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부동산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5퍼센트에서 오늘날 13퍼센트로 증가했다.

특히 헝다의 사업 모델은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먼저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전에 고객한테 아파트 대금을 받는다.

그래도 모자라는 자금은 자산관리상품(WMP)을 통해 조달한다. 자산관리상품은 연 7~15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은행 대출이 힘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을 완료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분양이 늘어나면 자금 경색에 직면하거나 손실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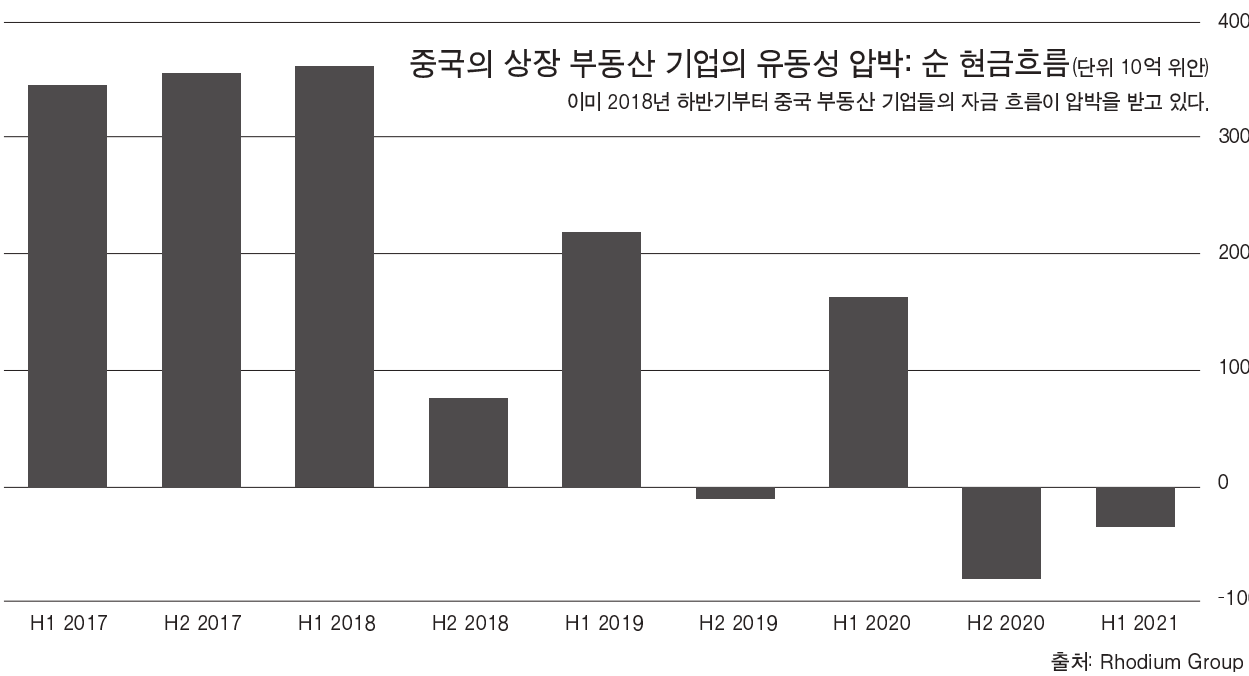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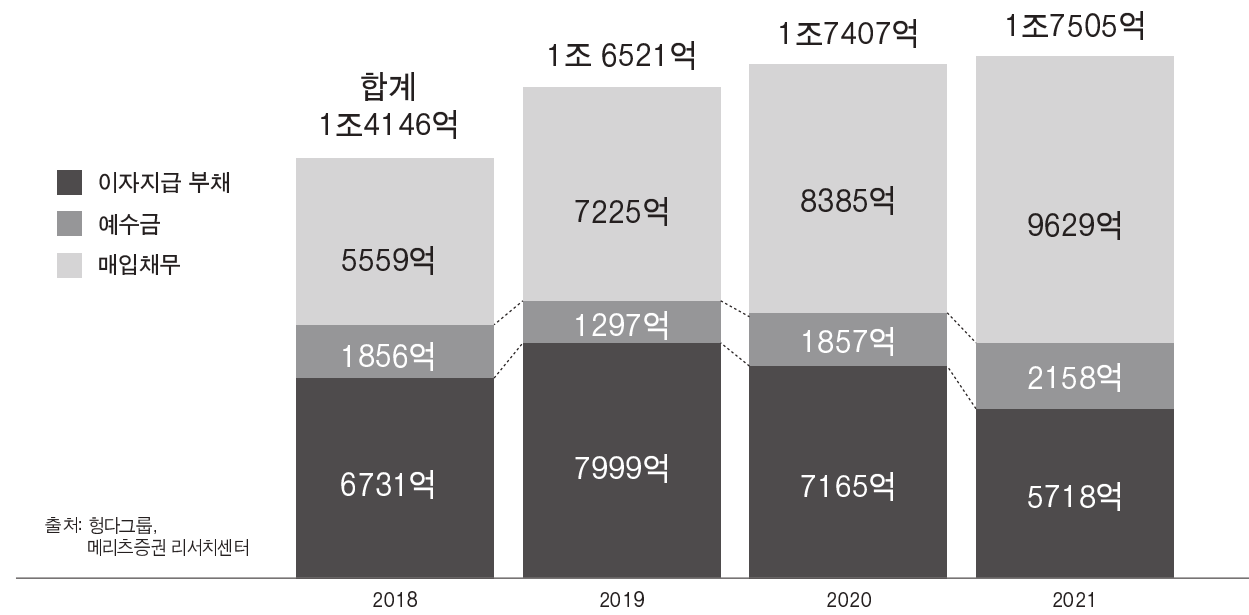
2012년에 헝다그룹이 완공한 아파트 중 80퍼센트가 분양됐지만, 지금은 아파트 가격을 15퍼센트나 깎아 줘도 40퍼센트가 미분양 상태에 있다. 자금 경색에 직면한 헝다그룹은 최근에 아파트 할인율을 30퍼센트로 높였다. 헝다그룹은 234개 도시에서 800여 개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120만 명이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국유은행을 통해 시장에 ‘물지마 대출’을 제공했고, 지방정부는 민간업자와 손잡고 부동산 개발을 촉진했다.

시진핑 정부는 2014년부터 인구 2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정부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중소도시 인프라 확대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되면서 수출이 주춤하자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른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무한정 좋을 수만은 없다. 최근 중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중 3분의 1이 빈집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현

헝다그룹 부채구조 및 추이(단위: 위안)



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채산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중국의 엄청난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더욱이 고공행진 하는 집값은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검은 백조

2019년 1월 시진핑은 중앙당고 세미나에서 거대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의미하는 ‘블랙 스완’(검은 백조)과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인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르고 같은 해 말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중앙당 총서기직을 5년 또는 10년 연임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 시진핑 자신이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내수 위주의 쌍순환을 제시했고, 빈부 격차에서 오는 대중적 박탈감을 달래려고 ‘공동부유’를 내세웠다. 공동부유라는 주장에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유예됐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시도가 재개됐다.

국가 전체 부채의 28퍼센트를 차지한 부동산 부문이 시진핑으로선 예의

주시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는 ‘3대 레드라인 정책’이라 불리는 부채 비율 관리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집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 정책은 부채와 관련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헝다는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 불량(레드)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더욱이 지난 1월 인민은행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발표해 그룹별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헝다그룹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자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7월 이후 두 달간 헝다그룹의 신용등급을 6등급 하향 조정해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시켰다.

그룹에도 대마불사 논리 때문에 중국 2위의 부동산업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 하나인 〈환구시보〉의 편집장이 헝다그룹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실제 파산 위험이 제기되며 국제 금융계를 뒤흔들었다.

*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70퍼센트 이하, 순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100퍼센트 이하, 단기부채가 자기자본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

헝다그룹은 시진핑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검은 백조’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현재 1조 9800억 위안(360조 원)으로 중국 기업 중 가장 많고, 올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7억 달러(8200억 원)에 이른다.

헝다그룹이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할 이자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없다면 헝다그룹의 파산은 기정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제2의 리만 브라더스?

헝다그룹이 중국 경제 전체와 나아가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촉매제가 될까? 헝다그룹이 제2의 리만 브라더스가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그리 황당한 질문이 아니다.

헝다그룹 외에 완커, 완다 등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헝다그룹과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헝다그룹 파산이 자칫 다른 부동산 업체로 확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물론 2008년 경제 위기와 현재 헝다그룹 사태에는 차이가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위기 때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이 천문학적 규모로 발행돼 전 세계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매각됐다. 그래서 위기 초기에 손실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총 부채 1조 9800억 위안 중 1조 위안 정도는 매일 채무로(왼쪽 위 그래프), 헝다그룹이 파산하더라도 매입한 토지나 원자재 등은 남아 있다. 또 헝다그룹이 갚지 못하는 대출금 때문에 국유은행들이 손실을 입을지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시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심지어 헝다그룹으로 인한 손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은행 체계를 꼭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의 “질서 있는 디폴트”를 선호한다. 헝다그룹을 구제한다면 제2의 헝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헝다그룹을 몇 개로 쪼개서 일부는 파산시키고 다른 일부는 국유화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정부가 주택부문을 국유화해서 중단된 아파트를 완공해 청약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채 위기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부채를 끌어와 사업을 추진했지만 불황으로 수익성이 하락해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조차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체가 향후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면 헝다그룹 같은 기업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 지금도 네 개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따라서 헝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2020년 현재 중국의 전체 부채(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은행, 가계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17퍼센트에 이른다. 부채의 규모가 서방 선진국 못지 않게 크지만 전체 부채 중 대외부채 비중은 15퍼센트로 매우 낮다.(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가 국유사업은 행의 손실을 무시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지만 국유사업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막을 수 없다. 또 자산관리상품을 구매한 기업이나 가계의 손실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더욱 기운 없게 만들 것이다.

시진핑은 헝다그룹을 “통제된 파산”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한다. 중국 경제의 ‘블랙 스완’이 헝다그룹 하나만이라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불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제2의 헝다그룹이 나타난다면 이는 시진핑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듯이, 헝다그룹 파산 위기에서도 시진핑은 노동자 대중이 그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방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너무나 닮아 있다.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김영익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오커스를 창설하면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적어도 8척 보유할 계획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잠항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에 따르면 호주에서 출항한 디젤 잠수함은 남중국해에 11일간 머물 수 있는 반면, 핵잠수함은 두 달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

호주 핵잠수함은 대만해협, 오키나와 근해에서도 장기간 머물며 중국 해군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 해군력을 급속히 강화해 온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강력한 대응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호주 핵잠수함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핵확산 불씨가 될 것이다. 핵잠수함에 쓰일 농축 우라늄이 핵폭탄에 들어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잠수함 연료로 쓰는 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핵확산까지 일부 용인하면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호주의 야심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과 맺은 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략적으로 더 밀착하기로 했다.

친여권 전문가인 문정인 교수는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같은 관련국들과 협력을 도모해 미·중 신냉전을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상황은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평화를 실현하기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오커스 창설과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



바이든이 주도한 오커스 창설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경쟁을 더한층 격화시킬 것이다

국의 단연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도 중국 봉쇄의 선봉을 자임하며 항공모함 건조 등에 들이는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증강을 더 자극할 것이다.

핵확산 위험

오커스 창설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국·영국·호주 3국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와 관련된 과학·기술·산업 기반·공급사슬의 통합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 로버트 캐플런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커스] 협정은 … 앵글로-색슨 핵심 군사 동맹을 세우는 효과를 냈다.”

이 동맹은 “영국을 통해 나토를 인도·태평양으로 연결해 줄 것”이고, 미국의 다른 태평양 동맹국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기술 지원 때문에 호주와 프랑스의 잠수함 계약이 파기돼 프랑스가 발끈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게 프랑스와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지는 것은 아시아에서 동맹 강화를 위해 충분히 치를 만한 대가였다.

<파이낸셜 타임스> 논평가 기디언

래크먼은 오커스를 옹호하며 이런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나토가 유럽에서 러시아를 억지하듯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힘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가입국은 최근 미국·호주와 해군 연합 훈련을 하는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가 포함돼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영미권 국가들의 정보 동맹체인 ‘파이프라인’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의 각종 군사·안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융합센터를 편택 미군기지에 짓는 방안을 포함했다.)

미국 중심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이 여러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보완

미국은 오커스가 아시아에서 기존의 군사동맹뿐 아니라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와 상호 보완적인 구실을 하

기를 기대한다.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도 오커스와 쿼드의 관계가 “상호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쿼드와 오커스는 참가국의 면면과 다루는 의제 면에서 중복되는 게 많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기존 참가국 외에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쿼드에 협력할 여지를 넓히려 해 왔다. 그래야 대중국 봉쇄에 가담하기를 꺼리는 그들을 한 걸음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의체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지원, 기후 위기 대응, 신기술 협력 등으로 쿼드 의제를 확장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확장된 의제들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9월 24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들은 기존 합의를 확장해 위성 데이터 정보 공유, 5G 등 통신기술,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기술 디자인·개발·거버넌스·이용에 관한 쿼드 원칙’에도 합의했는데, 이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표준 제정

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핵심·신흥 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접점이 커질 수 있다.

이 밖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있는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 현지에서 대만의 비공식 대사관 구실을 하는 곳이다. 이런 명칭 변경은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중국은 반격할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국의 핵무기 관련 투자는 지난해 대비 4배가량 늘었다. 오커스 때문에 중국은 기존 계획보다 더 큰 규모로 빠르게 핵잠수함 능력을 키우려 할 듯하다. 물론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에 많이 뒤쳐져 있지만 말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무대인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주장하는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사전에 신고하고 진입하라고 선포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아시아의 불안정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자 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의 핵심을 제약해서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에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김승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의혹 단계에서의 보도나 의견성 보도를 불온시하고 국가의 억압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국가가 '바람직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판별하고 후자를 징벌할 수 있게 해 국가의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를 단지 민주당의 대선용 치부 가리기 시도로만 봐선 안 된다.

그런 피상적인 관점으로는 첫째,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마치 민주 투사인 양 행세할 때 그 위선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게 만든다.(하단의 “우파는 표현의 자유에 관심 없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둘째, 그들만의 이전투구라는 생각 탓에 민주주의 권리를 방어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언론 통제의 본질

국가를 통한 언론 통제 강화 시도에

는 장기 불황과 지정학적 위기, 팬데믹 등으로 인한 기존 질서의 불안정화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자본주의 위기가 지속된 2010년대에 가짜뉴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관련 음모론이 세계적인 가짜뉴스로 유행했다. 이는 가짜뉴스 현상이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반영이자 증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배계급 다수는 가짜뉴스 유행 현상을 실제로 골칫거리이자 위협으로 여긴다. 그것이 정부 관료, 정부나 기업에 고용된 전문가, 대형 언론사 등 지배 이데올로기 기구 등의 신뢰 추락을 드러내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이런 현실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그들이 수혜자인 사회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억압적인 권력으로 매체와 언론을 감시하고 처벌해서 제약하는 것이 주된 대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가짜뉴스 검열·단속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실된 미디어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져서도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한 언론·집회의 자유 제한 조치들이 실제로 노동자들과 좌파를 겨냥해 얼마든지 휘둘러져 온 이유다. 민

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이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국가는 언제나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려고 해 왔다.

보편적인 언론 자유가 피억압자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체제와 지배자들을 마음껏 비판하고 폭로하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의 역할은 체제와 지배자들의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 사회에서는 국가의 본질이 비민주적인 억압 기구일 수밖에 없다.

근대 역명기에 부르주아지는 신분제에 예속된 봉건제 국가에 대한 저항을 지도하면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와 언론 자유를 약속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자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유와 실질적 평등은 노동계급에게는 이상화된 허울이었고, 현실과는 언제나 커다란 괴리가 존재했다.

가령 미국은 1791년 역사상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표현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위헌임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무려 1931년이 돼서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릴 때만 민주적 권리를 양보하고, 그조차 가장 제한적인 조치들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멈추려

해 왔다. 특히, 자본가 계급이 손쉽게 분쇄할 수 없을 수준으로 노동계급의 저항과 조직이 성장하고 지속될 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형식의 국가형태가 허용됐다.

한결같은 반대

국가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본질 때문에, 언론의 자유 보장과 반동적 표현의 규제를 모두 국가에 의존하려는 개혁주의적 시도는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개혁주의 정당들의 반대가 혼란스럽고 취약한 이유기도 하다.

예컨대 우파와 국가로부터 '종북' 공격을 받아 형·민사상 소송을 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2019)에서 국가가 언론에 더 많은 배상액이나 위자료를 물려야 한다는(민사 책임 강화) 제안을 하고 있다. 국가의 처벌 성격이 강한 형사와 달리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강화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의당과 언론 NGO,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 법안 강행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또 그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수정(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거쳐서 더 나은 국가 개

입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언론 규제에 다소 열려 있는 입장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의 물꼬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왼쪽에서 정당화해 줄 위험조차 있다.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중단시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 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있다. 이 경우 소송은 그들의 권리다.

그러나 소송은 계속되는 특정 가해나 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수는 있어도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가 낳는 폐해와 반동적 주장들을 근절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규제 강화는 민주적 자유·권리에 대한 제약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반동적 사상과 행동들에 맞서 싸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중립적 존재가 아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의 주된 증진자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국가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새로운 권력과 권한도 결국 노동자 운동과 좌파적 세력(그리고 그들의 언론)을 향해 사용될 것이다. 좌파가 이 점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다.

언론의 자유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국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곧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 반동적 주장과 세력들을 방치하자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였던 트로츠키는 1938년 멕시코에서 반동적 언론을 국가 검열로 규제하려고 하는 스탈린주의자들(공산당)의 시도에 대해, 부르주아 국가를 강화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반동적 언론을 금지함으로써 반동적 생각에서 해방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짓]”이다.

“실제로는 극대화된 표현의 자유만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반동적 언론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조직과 언론을 통해 스스로 완수해야 할 과제를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적인 주먹에 내맡길 수 없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언론 개입을 반대하는 사회주의적 견해는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시장론’, 즉 서로 다른 주장과 사상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이 이론 속에만 존재하듯이, 사상의 자유시장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등을 이용할 능력의 격차가 계급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입장은 가짜뉴스나 반동적 주장이 판을 칠 때 무력하거나, 다시금 국가에 의존하는 길로 기울기 십상이다.

이와 달리, 사회주의자들의 대안



1987년 반독재 항쟁 물결의 일부였던 언론 민주화 운동

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반대하는 동시에 반동적 집단과 그들의 주장에 맞서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투쟁함으로써 민주적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다.

이미 그러한 투쟁들은 저항의 역사 속에서 솟아게 벌어져 왔다.

제1차세계대전 시기에 미국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 노동자들은 전시에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던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이들을 규탄하기 위해 9년 동안이나 표현의 자유 투쟁(Free Speech Fight)을 벌였다.

또, 1960년대 버클리대학 학생들은 반전 운동과 흑인 평등권 운동에 고무받아 정치 활동을 활발히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약하려는 대학 당국에 맞서 연좌 농성과 점거 등으로 언론자유화 운동(FSM)을 벌여 성과를 거뒀다. 이는 1968년 운동 물결의 일부였다.

한국에서 벌어진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파업도 한 사례다. 엄혹한 독재 치하에서도 노동계급 대중은 저항했고,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폭로 등 언론의 자유 요구와 투쟁도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투쟁들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더 큰 사회 변화를 위한 급진적 사상과 주장을 담기 위해 필요한 소중

한 ‘그릇’이었다.

국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가에 요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법률을 이용하거나 바꾸는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체제가 아직 유지되는 한, 그 체제가 강요하는 규칙에 저항하고 그것을 바꾸려 투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법률이 더 나아지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 스스로의 행동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금 강조컨대, 아래로부터의 능동적인 대중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나아가 집단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언론·표현·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미 한국 국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다.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법원조차 거치지 않고 게시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국가보안법까지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권리의 핵심을 제약하는 시도다. 기존의 강력한 언론 규제들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나자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말이다.

우파는 언론의 자유에 관심 없이 위선 떨 뿐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부패한 치부를 숨기는데 급급해 시작한 일로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점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우파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민주 투사라도 된 양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지독하게 위선적인 것이다.

우파들은 갑자기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관심 있는 척하지만, 그들에게는 평화적으로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받고 있는 청주 활동가들의 자유는 안중에 없다.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면서 쿼어문화축제 조직위를 불허한 서울 시장 오세훈에게 성적 지향 표현의 자유는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지만 그 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 인터넷 준실명제 부활 법안을 슬쩍 발의해 놓았다.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 통제 강화 시도의 진정한 목적이 민주주의 제한에 있으므로 우파와 국민의힘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가장 오래 집권했던 정당이고 현재도 거대 야당으로서 대자본가들의 제1선호 정당이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다시 집권할 수도 있다. 그들이 다시 집권한다면 언론 규제는 그들의 주된 무기가 될 것이고, 추가적인 공격도 얼마든지 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은 야당이고 대선을 앞둔 힘 겨루기가 벌어지고 있

는 지금 시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맞장구쳐 주지 않으려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쟁을 벌이고 반사이익 이미지를 챙기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을 뿐,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제대로 저지할 생각이 없다.

우파와 지배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있는 만큼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거대한 이데올로기 기구이기도 한 국가를 이용할 수 있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언론사를 설립하거나 활용할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현 사회에서 미미하게 존재하고 따라서 정말로 쟁취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확장해야 하는 자유이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제26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가 올해 11월 1~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등이 이 회담의 결과로 채택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60퍼센트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늘어난 산불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빠르게 증가했다(2.6퍼센트). 지난 30년간 권력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인류의 미래에 커진 적색 경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최근 벌어진 극심한 폭염과 산불,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낳은 홍수 등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불과 10여 년 후에 기온이 한계치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재앙

이런 상황에서 더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각국 권력자들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COP26도 과거 정부들의 회담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날 것이 뻔하다.

물론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력이 큰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은 과거보다 향상된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치들도 재앙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각국 정부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net-zero, 흡수량으로 배출량을 상쇄한다는 뜻)로 만들



사진 출처: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물리)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 2019년 스페인에서 열린 COP25에 항의하는 시위

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늦는 데다가, 넷제로는 탄소 배출은 계속 하면서 나무 심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탄소포집저장기술 등을 활용해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배출량이 늘어나도 넷제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미심쩍은 개념인 것이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UN은 현재 각국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1퍼센트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과학자들은 재앙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경고해 왔는데 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파리협약에 복귀했지만 그가 발표한 목표치들은 파리협약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 바이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52퍼센트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

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7~63퍼센트 감축해야 한다.(국제 환경단체 기후대책추적(CAT))

무엇보다 각국 정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 늘리며 COP28 유치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은 최근 유엔 총회에 참석해 2023년에 열릴 제 28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8)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을 늘려 왔을 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으로 찍혀 있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극도로 꺼린다. 바이든은 프래킹[수압 파쇄로 석유·가스를 시추하는 것]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도 기업들이 탄광을 개발해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각국 정부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에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기도 하다. G20 국가들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기업 지원금 중 80퍼센트가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의 공동연구)

이처럼 각국 정부들은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하며 기후 위기에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등의 육성 정책을 말하지만 이조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녹색 성장'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이처럼 이익 경쟁을 우선하는 관점으로는 자본주의에 뿌리박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착수할 수 없다.

이런 지배자들의 위선을 규탄하며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해 온 것이 비판받자 올해 10월부터는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내 수출을 지원해 오다가 임기 말에서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봉양2호기 등에 대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중 시위가 세계적으로 벌어졌다. 2019년 9월에는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이 거리에 나섰다.

올해 COP26을 앞두고도 최근 9.24 국제 기후행동이 벌어졌고,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영국과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영국의 기후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활동가 등은 영국의 40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만 봐도 COP26이 기후 위기 해결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후 위기를 막을 진정한 힘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주된 피해자인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대중운동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운동의 성장을 통해 자본주의가 아닌 환경과 인간의 필요를 위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에만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COP26을 앞두고 발표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각계 의견을 반영해 확정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원으로 한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SK 등 기업 임원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안이 나오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실한 승자 없는 독일 총선, 주류 양당의 위기를 보여 준다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총선 결과가 나오자 국내 언론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16년 만에 제1당이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은 우려를, <한겨레> 등의 중도 언론은 기대를 드러내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민당은 인기를 잃고 있던 기민·기사연합을 간발의 차(1.6퍼센트포인트)로 앞섰을 뿐이고, 역대 둘째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독일 총선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

[9월 26일 현재]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독일 총선 결과는 박빙이었으나 우파가 나쁜 성적을 거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집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연합은 고작 24.2퍼센트를 득표했다고 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성적이다.

2017년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은

32.9퍼센트를 득표하고 의회 내 최대 교섭단체가 돼 연립정부를 이끌었다.

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쓴맛을 본 것은 이윤을 우선시한 그들의 팬데믹 대응 정책과, 독일의 커져가는 빈부 격차에 대한 대중의 분노 때문이었다.

선거 결과에 대해 기민당 사무총장 파울 지미악은 굳은 얼굴로 "개표 동안 긴 밤"을 지새게 될 것이며 "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민당의 주된 경쟁자는 사민당이다. 사민당은 이전 연립 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했다.

독일제2공영방송(ZDF) 뉴스의 여론 조사를 보면 사민당은 근소하게 성적을 올렸고 매우 근소한 차이로 최대 정당이 될 듯하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25.8퍼센트로 지난 선거보다 5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이다.

사민당은 퇴임 총리 메르켈의 적자

이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자처했다.

이제 새로운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며 여기에는 더 작은 몇몇 정당들도 관여할 것이다.

물결

녹색당도 그러한 주요 정당 중 하나일 것이다. 녹색당은 14.6퍼센트를 득표했으며 세 번째로 큰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것이다. 녹색당 득표율은 지난 총선의 8.9퍼센트에서 크게 오른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분노와 우려의 물결을 반영한다.

기민당의 지미악은 기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FDP)으로 이루어진 "미래 연정"을 꾸릴 가능성을 거론했다.

"집권"을 간절히 원하는 녹색당 지도부는 그런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 둘 것이다. 녹색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많은 수가 사민당과의 연정을 선호할 것

임에도 그렇다.

극우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득표율이 11.1퍼센트로 줄어 좌절을 맛봤다. AfD는 이제 다섯 번째로 큰 원내 단체가 돼 주요 야당을 자처할 수 없게 됐다.

좌파당은 안타깝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좌파당의 득표율은 5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총선의 9.2퍼센트에서 떨어진 수치다.

사민당이 최대 득표 정당이 돼 우파와 경쟁하면서 좌파당이 사민당에 일부 표를 빼앗겼을 공간이 크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이지 않았다. 좌파당 지도부는 너무 자주 좌파당을 집권 가능한 주류 정당의 일부로 보여 주려 했다. 그 결과 유권자의 눈에 좌파당은 사민당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게 됐다.

좌파당 지도자들은 좌파당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맞서 저항하는 세력으로 비치게 하기보다는 선거와 의회 정치에 전적으로 골몰했다.

좌파당은 지방 정부에 참여한 모든 주에서 자신이 내세운 목표를 거스르는 결정을 지지했다. 민영화나 석탄에 대한 지원, 심지어 이민자 추방에 대해 그렇게 했다.

이런 후퇴 때문에 좌파당은 심각한 대가를 치렀다. 향후 투쟁을 벌이려면 이런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일에서 어떤 연립 정부가 들어설지는 몇 주가 지나야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연립 정부가 꾸려지든 팬데믹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강력한 좌파가 거리와 일터에서 거기에 맞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4호 / 번역 이원웅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전주현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남녀의 능력 차이나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오늘날 20대 여성은 통상 남성보다 노동시장에 먼저 진출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교육 수준과 직무 경험 및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다.

성별 임금격차는 체계적인 여성 차별의 결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서 비롯한다.

기업주들은 노동계급을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데 여성 차별을 적극 이용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계급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남녀 노동자의 단결을 방해하는 데 특화된 구실을 한다.

무엇보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보육 부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주들에게 노동력 재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그 부담을 주로 노동계급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국가는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얼마간 제공하기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대개 출산·양육기인 30대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경력 단절을 겪는다. 이후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주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린다. 그래서 경력 단절 이전보다 평균 임금이 27만 원이나 깎인다.(여성가족부 조사, 2020)

현재 여성 노동자의 45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21.7퍼센트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렇게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 중년 여성들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임금이 잘 오르지 않고, 진급 기회도 거의 없다.

그래서 30대에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기 시작해, 50대에 이르면 연평균 임금격차(2019년 기준)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한국의 성평등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성평등 개혁을 약속했다. 고질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말만 요란했을 뿐 유의미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큰 실효성 없는 ‘성별 임금공시제’와 ‘승진 할당제’를 내놓는 데 그쳤다(그나마 임금공시제는 기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시행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가족·돌봄 복지 확대에 매우 인색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1.1퍼센트로 OECD 평균 20.1퍼센트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근 2년 연속 보육 예산이 삭감됐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20.6퍼센트나 줄었다. 무기 구입 등 국방비에는 돈을 왕창 쏟아부으면서 말이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도 알맹이가 쏙 빠진 미미한 개선 외에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여성 노동자를 더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인상률로 억제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직무급제를 ‘평등 임금’으로 호도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처지를 더 악화시키려 한다.

여성 일자리 질 제고에 중요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기극으로 끝났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냉담한 외면과 탄압으로 응답했다.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받았고 노동조건도 악화됐지만, 정부는 임시·단기 일자리를 짚끔 제공하는 것 외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은 허울뿐이고 오히려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가 더 심화됐다”는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일각의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한국은 20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1위다 2018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젠더 이분법 아닌 계급적 단결 투쟁이 대안

이토록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는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임금격차 해소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심각한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국제 노동자 운동사에는 기층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대폭 올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상당히 줄인 경험 이 많다.

1970년 남성 임금의 고작 63퍼센트를 받던 영국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른 것은 1969년~1975년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포드 재봉공 등 여성 노동자들이 동일임금 쟁취 투쟁을 벌인 덕분이었다. 이 투쟁은 3주 동안 포드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멈추면서, 여성 임금을 남성의 92퍼센트로 끌어올렸다.(관련 기사: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노동자 연대〉199호)

한국에서도 1985년 이후 10여 년간은 성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 투쟁 물결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동일임금 투쟁이 활발히 일어난 결과였다. 당시 많은 남성 노동자도 여성의 저임금과 여성 차별에 반대해 함께 투쟁했다.

하지만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기업주들과 국가의 공격이 강화된 데 비해 노동계급의 저항이 충분치 않으면서 임금격차 축소 추세가 중단됐다. (관련 기사: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노동자 연대〉239호)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 대중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여성 차별이고, 여성운동의 핵심 과제가 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에서 급진 페미니즘이 크게 득세

하면서 운동의 쟁점은 성폭력 쟁점 위주로 이뤄졌다.

착취·계급 문제가 실종된 채, 남성 개인 단죄하기에 몰두하는 도덕주의적 방식은 운동의 파편화와 분열을 부추겨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 해악적이다.

노동운동 내 좌파 상당수가 급진 페미니즘의 이런 젠더 이분법적 접근법을 추수하며 성차별에 맞선 계급 투쟁을 경시해 온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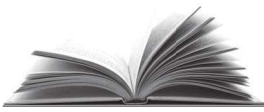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매년 ‘여성의 날’ 집회에서 거론했지만, 이를 위한 진지한 투쟁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1년에 한 번 외치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배자들의 임금·일자리 공격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단결된 임금 인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건보공단 여성 상담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시·탄압했다



서평 | 《죽은 역학자들 —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김현진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월러스의 신간 《죽은 역학자들》(너머북스, 구성은·이지선 옮김)이 나왔다.

지난해 번역돼 나온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 이지선 옮김)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글들이라면, 이번 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쓴 글과 인터뷰 모음이다.

롭 월러스는 지난 25년간 신종 전염병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 왔다. 2007년 그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근원을 1990년대 중반 중국 광둥성으로 지목한 첫 번째 연구의 주요 저자였다.

그가 찾아낸 전체 그림은 중국 경제 개발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대한 이주가 있었고, 1985~2000년에 농민은 노동자가 되고 농업은 산업 농업이 되면서 전염병의 병원체 역시 산업화된 것이었다.

즉 전염병의 정치·경제적 기원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책의 핵심 메시지도 “구조적 문제”를 빼고 전염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조적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다.

월러스가 바이러스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을 파고들자 그때부터 학계에서의 경력에 사실상 차단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블로그 ‘병원균 농업’을 통해 산업형 농업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돼지 독감이 유행할 때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월러스는 식품점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연구와 글쓰기를 지속했고 기어코 7년 만에 거대 농업과 팬데믹의 위험을 경고하는 책을 냈다.

롭의 부모도 물리학자이자 생태학자였다. 둘은 무기 연구소 설립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만났고, 스티븐 제이 굴드와 리처드 르윈턴 같은 급진 과학자들의 초기 그룹을 함께 조직했다.

그래서 《죽은 역학자들》의 3장과 9장은 자신의 아버지인 로드릭 월러스(수학역학자)와 함께 썼다.

서커스단의 소년과 코끼리

이번 책 첫 페이지에서 월러스는 이 책을 코로나19로 숨진 육류 가공 노동자들에게 헌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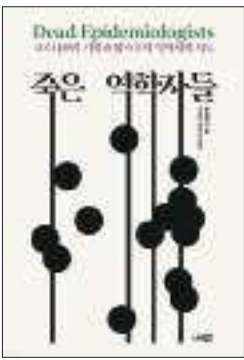
책 5장에서 저자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대우를 고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육류 포장 공장에서 사망자가 나오자 더러운 이민자가 코로나19를 공장으로 들여왔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기업의 대변인은 자기 기업의 (이민)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특정 문화권의 생활환경은 전통적인 미국 가정의 그것과 다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직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은 번번이 실패하고, 역학자는 사후 뒤흔다꺼리를 주로 맡는다



죽은 역학자들
—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

롭 월러스 지음, 구성은·이지선 옮김,
너머북스, 308쪽, 21,000원

업안전건강관리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감염된 공장 노동자를 증상이 있을 때만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죽은 역학자들》은 세계 각국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실패한 것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중보건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에 내맡길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이런 조건에서 “역학자가 주로 하는 일은 서커스단 소년이 샵을 들고 코끼리 뒤를 쫓아다니는 식의 사후 관리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아래에서 역학자나 공중보건 기관은 치명적인 감염병을 부르는 최악의 관행들을 합리화하면서 시스템이 실패한 뒤 뒤흔다꺼리를 하고, 그 대가로 펀딩을 받는다.”

《죽은 역학자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야생식품 시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도 자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거래의 규제 완화가 진행돼 모든

것이 점점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종이 사는 곳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도 H5N2를 비롯한 H5N 시리즈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지였음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절대적 지리가 아닌 ‘관계적인 지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보면, 전염병의 핫스팟은 뉴욕, 런던, 홍콩 같은 세계 자본의 중심지들이다.

“예를 들어 [바이엘, 카길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콩 공화국’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걸쳐 있다.”

새로운 지리가 경영과 자본, 하도급과 판매망, 초국적 토지 매입을 따라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 농업 기업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운영하는 ‘상품 공화국’들을 타고 새로운 전염병의 동학이 만들어진다. 숲이 사라지고 질병이 출현할 환경이 만들어진다.

삼림 벌채의 범위가 클수록 더 특이한 동물원성 병원균이 먹이 사슬로 침투한다.

지카 바이러스도 사스 바이러스처럼 숲을 나와 확산됐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적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 역시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추진력을 줬다.

지난해 7월에 나온 유엔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인간 전염병 넷 중 셋은 동물원성 기원이다. 《네이처》의 한 연구를 보면, 그중 절반이 농업적 동인과 관련 있다.

‘보이지 않는 거인’

“현재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군은 농산물과 축산물이다. 그런데 자본주

의 산업화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대부분을 유전적으로 단일화시켰다. 치명적인 병원체를 스스로 배양하는 셈이다.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농업은 자신을 방어할 자체적 수단이 없다. 따라서 백신과 항생제에 의지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소농을 비난하고 농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산업형 축산의 표준 위기관리 대응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거대 농축산기업들이 번식과 사료, 생장, 도축, 판매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

‘자유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대신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있다.

카길, 타이슨푸드, JBS, EW, 헨드릭스제네릭스, 그리고, 바이엘, 다우듀폰, 켐차이나 등 소수의 거대 농업 기업들이 전 세계 종자, 비료, 살충제, 제초제, 곡물, 소, 돼지, 닭, 달걀, 농토, 담수, 목초지, 저장과 운반, 가공과 판매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

물론, 채굴산업과 루이비통 같은 사치품 산업도 아마존과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국영 은행들, 금융 자본, 정치인과 정부들이 이들 모두를 밀어준다. 정부의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도 주로 이들이 차지했다.

과학 연구와 연구비의 많은 부분도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

이윤에 눈먼 기업들은 오히려 모든 위험을 숨기고 뻔히 역학적으로 위험한 사업을 벌이지만, 그 막대한 피해는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저자가 계속 강조하듯이, 사실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와 수준의 해악들이다.

따라서 “질병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질병의 인과관계와 방역을 보는 시각이 생물학이나 생태 보건학을 넘어서 너무 폭넓다 싶을 정도까지 생태 사회학적 분야로 뻗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기술 유토피아적” 접근과 환상도 경계한다. 거대 농업 산업이 우리를 이대로 묶어두기 위한 술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기술’이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해 특정한 형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립적이고 저렴한 도구인 양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기술은 특정한 물질적 요구들과 이어져 있다.”

따라서 《죽은 역학자들》은 “에코헬스”, “원헬스”, “지구공학적” 접근, “기술자본주의” 연구기관의 주장 등 우리를 현혹시킬 만한 사이비들을 비판하고 있다.

유목민과 버펄로의 존재 가치,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에티오피아의 유칼립투스 사례 등은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11장)

문제는 자본주의다

농업 사회학자와 함께 쓴 11장에서는 식물성 대체 고기 산업과 세포 농업의 육성을 제안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비판한다.

《민주주의는 없다》의 작가 에스트라 테일러 등은 그런 뉴딜처럼 “공공 주도 투자”로 대체육 사업을 육성하고 기존 축산업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나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배양육 산업에 투자한다.

이미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이 식물성 대체육을 생산하고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의 40퍼센트를 장악한 거대 농축산기업 카길은 곡물로 만드는 인공고기나 줄기세포로 고기를 배양하는 세포 농업(배양육) 장사를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저자가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적 경제 자체가 흐려졌다. 회전문과 같다고 할까. 회사 사람이 정부 관료가 되고, 정부 관료가 회사 사람이 되고, 다시 정부 관료가 된다. 회사나 정부로 돌아올 때마다 지위가 더 높아진다.

카길은 오랫동안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누렸다. “공공 주도 투자”로 정부가 과연 이들을 대체할까.

또한 롭의 비판처럼 유목민들과 소농들이 무슨 죄인가. 소나 양을 키웠을 뿐 그들이 지구를 망친 게 아니다.

“생태적, 사회적, 방역학적으로 오로지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그런 고기는 없다.”

만약 축산업을 없앤다고 해도 카길, 바이엘, 다우듀폰, 켐차이나가 지배하는 세상 그대로라면 산업 농업은 얼마든지 지구를 파괴할 것이다. 따라서 역시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진 출처: Monthly Review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이재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릴 정도다.

정부 지원 축소는 교육 환경과 구성원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부실 대학' 출신이란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은 일부 대학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동부산대와 서해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폐교됐다.

따라서 이번 명단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대학 18곳이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그중 2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대학들도 계속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게 학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정부는 차별적 재정 지원으로 대학들에게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하위권 대학들을 퇴출하려 한다.

재정 지원 제한과 대학 구조조정 압박은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하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노동계급과 서민층 자녀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조처는 사회 전반에서 계급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부실하거나 부패한 대학을 폐교할 게 아니라 국공립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주의적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 방향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학 구조조정의 주요 근거로 든다. 일각에서도 이런 논리로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정부 지원 축소는 교육 환경과 구성원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월 30일 교육부의 평가 결과를 규탄하는 성신여대 학생, 직원, 교수들

대학 내에서 학과·교직원·청소노동자를 구조조정할 때에도 적용되곤 한다.

그런데 대학 당국에게는 학령인구 감소가 수입원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역대 정부들은 대학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내맡겨 왔다. 80퍼센트가 넘는 사립 대학 당국들은 대학 운영 재정을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9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국내 대학 공교육비에서 정부 재원 비율은 39.7퍼센트에 그친 반면에 민간재원 지출 비율은 60.3퍼센트에 달했다. GDP 대비 고등교육부문 정부재원 비율(0.6퍼센트)도 OECD 평균(0.9퍼센트)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지원 대상 속아내기에 더 치중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가 또다시 대학 구성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대학들을 퇴출하고 정원을 감축해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정부 재원을 줄이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노동계급의 대학진학률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추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는커녕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 왔다. 그러면서 정부들은 굳이 대학에 가지 말고 바로 취업하라면서 고졸 취업 정책들을 내놓았다. 고졸 청년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렸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시장주의 강화하기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도 정부가 말하는 진단평가의 근거 중 하나다.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해 교육역량을 키우는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대학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는 학문과 연구의 상업화로 이어진다. 대학은 기업에게서 연구지원비를 수수 받는 연구만을 하도록 교수들을 압박한다. 학생들은 기업 맞춤형 인재가 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온갖 융합학과들이 생겨난 배경이기도 하다. 결국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는 기업 입맛에 맞는 기술과 숙련도를 갖춘 노동력을 뜻한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정부는 대학 교육을 책임지지 않을 테니 대학들이 알아서 경쟁

력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대학들은 경쟁력을 높이려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고, 정규직 교원을 늘려 교강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대신 대형 강의를 늘리고, 대학적립금을 쌓아 둔 채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을 강요하고, 학생 자치공간을 늘리는 대신 으리으리한 건물과 쓸데없는 조형물을 세운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은 경쟁력을 증명한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다. 지난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투입된 정부 재정 지원 예산은 총 1426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퍼센트였다. 세 대학에 투입된 2019년 예산은 하위 151개 대학에 지원된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결국 정부가 진단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 변화에 따라 대학을 재편해 기업들의 경쟁력 재고를 도우려 하고 있다.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겪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기업 지원·SLBM 개발·F35A 도입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지만, 대학 재정은 줄 세우고 잘라내기 식이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대학 교육을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

10월 7일(목)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공저자,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이번 대선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속에서 치러지는데다 문재인의 정부의 개혁 배신 탓에 정권 교체 바람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도 선두권이고요. 얼마 전에는 민주노총 전현직 지도자들의 이재명 캠프행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재명의 정치와 그 한계, 그리고 노동운동 측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참가신청
bit.ly/1007meeting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박설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입가경이다. 9월 15일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여 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지속하자, 이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켜 주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장 가동이 재개되자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9월 26일에는 무장한 경찰 병력 수천 명이 별 때같이 달려들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연행되고 부상을 당했다. 다음 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경찰이 “사측의 사설 경비대”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권 말기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은 9월 2일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이미 본격화했다. 코로나 방역은 핑계였을 뿐이고,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 뒤로 우파는 더 기가 살아서 날뛰고 있다. 우파 정치인과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 사망을 이용해 택배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리고 지금 SPC 화물 노동자들을 “불한당”, “폭력배”로 몰아세우고 더한층 강경한 진압을 주문하고 있다.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열망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 분노의 반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안달이다. 삼성 이재용을 가석방하고, 청주에서 F-35 반대 운동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 등이 보여 주는 바다.



사용자 비호하며 노동자들을 에워싼 경찰 병력

대체수송은 ‘파업 파괴’의 다른 이름

SPC 사측과 정부, 우파 언론은 파업을 고립시키려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악선동을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불한당으로 몰아붙인다” 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대표적으로 우파 언론과 경찰, 검찰은 이번 파업이 사측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노노 갈등”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한국노총과 “이권 다툼”을 하다가 안되니까 엉뚱하게 사측을 향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하루 3~4시간에 이르는 대기시간(공짜 노동)을 개선하고,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어난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말이다.

SPC 사측은 노조와 맺은 합의를 번번이 뒤집고는, 이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그리고 합의를 반복할 때마다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한국노총을 핑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85호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정부와 우파 언론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회·농성 진압이 불가피하다지만, 지금껏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는 집회가 아니라 보건 당국의 방역 단계 완화였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방역 단계를 낮추고 ‘위드 코로나’ 하자는 자들이 유독 노동자 집회를 문제 삼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야외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하면 야외 집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관련 기사: 본지 385호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특히 사측과 정부, 우파 언론은 노동자들의 대체수송 저지 행동에 아주 신경질적이다. 노동자들이 밀가루나 야채·소스 등의 원재료 공장 앞에서 농성 대열을 유지하며 수송 차량의 출입을 막아서는 것이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과격”, “폭력”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수송 차량 투입은 파업 파괴가 목적이다. 파업 효과를 크게 제약하고 노동자들(파업 참가자와 불참

자)을 분열시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파업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체수송 차량 운전자는 비조합원(용차)일 수도 있고,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조합원일 수도 있다. 그는 먹고살려고 운전대에 앉은 평범한 노동자이지만, 사측은 그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수송 차량 운전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파업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계급을 분열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를 중단하라.”

따라서 대체수송 저지는 노동운동의 “타락”이나 “폭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파업 결정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행동이다.

게다가 지금 경찰 병력이 사측을 비호하며 파업 방해에 나섰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농성 대열을 짓고 투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대열이 더 크게 결집해 효과적으로 대체수송을 저지·지연시킨다면, 파업 효과를 높이고 파업 참가자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 앞당겨야”

SPC 화물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은 지지와 연대를 모으는 데서도 효과를 내고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탄원서에는 하루도 안 돼서 5000명(추석 연휴 기간), 8000명이 넘는 사람들(추석 연휴 직후)이 서명했다.

투쟁 현장에는 SPC지부 소속 노동자들 외에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수백 명씩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활동가들 사이에서는 10월로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화물연대 중앙위원은 말했다. “화물연대는 10월 중순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SPC 동지들의 파업이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무너지면, 안전운임제 투쟁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파업을 당기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승기를 잡아야 다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가는 말했다. “SPC 동지들이 잘 버텨 주고 있지만, 경찰 병력이 워낙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체 차원의 대열이 결집해서 공장이나 도로를 틀어막든가, 함께 파업을 해서 병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화물연대답게 싸워야 합니다.”

SPC 화물 노동자들이 십자포화를 맞으며 홀로 싸우게 되서는 안 된다는 활동가들의 지적이 옳다. 화물연대가 파업 일정을 앞당겨 함께 싸워 성과를 낸다면 안전운임제 투쟁에도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을 탄압하는데 “정권의 인위적 비호까지 동원”됐다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전쟁 선포”라고 선언했다. 그런 만큼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의 연대도 확대돼야 한다.